

#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가능성

김연철

중국 - 대만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전병곤

## 중국 - 대만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전병곤 | 통일연구원 | jubykon@kinu.or.kr

### I. 서론

본 연구는 양안 교류협력의 경험이 남북 교류협력에 주는 함의를 찾으려는 연구목적을 갖고 출발한다. 이러한 연구 주제는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보다 양안관계는 한반도 통일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일모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통일의 과정에는 당사자 간 많은 교류협력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분단국인 양안의 교류협력 경험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가 재선됨에 따라 향후 양안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던 민진당과 달리 국민당은 양안관계의 안정을 통한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에 대한 대만 주민의 선택이 선거결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잉주 집권 1기인 2010년 6월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을 체결하는 등 양안관계는 안정적인 발전과 교류협력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양안 교류협력의 경험은 같은 분단국인 남북한의 교류협력 관계를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양안 교류협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남북 교류협력에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안관계와 남북관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중국과 대만의 경험을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갖는 유사성은 쌍방이 모두 체제와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로서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일한 민족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일이나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역사적 배경, 체제를 비롯한 쌍방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주동성과 피동성 그리고 국제적 지위 및 실질적인 교류협력 등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상이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력의 상대적 우위, 우월적인 국제적 지위, 이를 바탕으로 한 양안 교류협력의 적극성의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이 우리와 유사하다. 반면, 이념과 체제의 유사성과 경제발전 수준의 측면에서는 대만의 입장이 우리와 유사하다. 이로 인해 많은 경우 ‘한국=대만, 북한=중국’ 혹은 ‘한국=중국, 북한=대만’의 등식이 교차한다. 따라서 양안 교류협력의 사례가 남북한 교류협력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에 우리의 입장을 적용하기보다는 양안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남북관계에 교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일방에 고정되지 않고 대만 및 중국의 입장 그리고 양자 간 교류관계에서 나타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안 교류협력이 남북교류협력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CFA 체결을 전후한 양안의 정치경제적 교류협력의 변화를 분석·평가한 후, 이를 남북 교류협력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남북관계에 적용 가능하고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대외적 요인이 양안관계 및 남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양안 및 남북한의 양자관계에 치중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중국-대만 관계의 전개 및 특징

### 1. 정치적 교류협력 관계

1978년 이전 중국의 통일정책은 사회주의 이념 및 무력사용을 통한 대만해방이 목적이었다. 다만, UN 복귀(1971), 미중 상해공동선언(1972) 이후 무력해방 정책을 평화해방 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무력해방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대만과의 대화를 시도(통일 전선전술운용)하는 한편,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대만 역시 이러한 중국의 대만해방 시도에 대응한 ‘뎡복대륙’ 또는 ‘반공대륙’의 통일정책을 추진했는데,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응해 군사반공정책에서 정치반공정책으로 선화하였다. 이는 중국 내부 반공산당 세력의 반공투쟁과 결합해 공산당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sup>1)</sup>

이러한 양안관계가 크게 변화된 계기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이념보다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만 정책의 기조도 평화통일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평화통일 기조는 ‘하나의 국가·두개의 제도’라는 「일국양제」의 통일방안과 대만과의 ‘삼통(三通:通商、通郵、通航)’·사류(四流: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교류)’ 정책으로 함축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정책변화가 양안 간의 긴장완화에는 기여했지만 구체적인 교류협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대만이 중국의 ‘일국양제’, ‘삼통사류’의 평화공세에 대응, 대만 내부의 안정과 중국의 평화통일전선에 대한 불신에 따른 수세적·방어적 전략인 ‘삼민주의 통일정책’과 불타협·불담판·불접촉의 ‘삼불정책(三不政策)’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대만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친지방문 허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양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교류도 민간차원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교류협력에 부응해 대만은 1990년부터 1991년까지 국가통일위원회를 설치하고 호혜교류단계, 상호신뢰와 협력단계, 협상통일단계인 3단계 통일방안이 포함된 국가통일강령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공산당의 대대만 중앙공작영도소조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에 상응하는 대만의 공식 기구로 행정원 대륙위원회와 함께 국가통일위원회가 성립되었다.

아울러 대만은 경제와 정치, 민간과 정부의 분리 원칙하에 정부 간 대화의 대체통로로서 외형상 민간기구인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를 발족시키고, 양안 교류협력을 전담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만은 더 이상 중국을 반란단체로 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치실체 및 대화상대로 간주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동원감란시기(動員戡亂時期)’ 규정을 폐지하였다.<sup>2)</sup>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해 양안의 교류협력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문제를 처리하는 준정부기구인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를 1991년 창설하였다.

따라서 양안의 교류협력은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3년 이 두기구의 회장인 왕다오한(王道涵)과 구전푸(辜振甫)는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갖고, ‘양안공증서 사용·사증협약’, ‘양안 등기우편물조사·보상에 관한 협약’, ‘양안 연락과 회담제도 협약’ 및 왕·구(王辜)회담 공동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양안 교류협력의 제도화 노력은 1995년 장쩌민(江澤民)의 담화인 ‘강팔점(江八點)’으로 이어졌는데, 장쩌민은 이 담화에서 양국 정상 상호 방문을

1) 개혁개방이전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과 입장은 각각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다. 張春英 主編『海峽兩岸關係史(第三卷)』, 廈門 福建人民出版社, 2004; 張麗賢合,『兩岸關係變遷史』, 北京 周知文化出版社, 1996.

2) 張春英 主編『海峽兩岸關係史(第四卷)』, 廈門 福建人民出版社, 2004, pp. 954-959.

비롯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한 양안의 평화통일 및 경제교류협력을 제의하였다.<sup>3)</sup>

반면 리덩후이는 대등한 실체로서 양안의 교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골자로 하는 소위 ‘이육조(李六條)’를 제기한데 이어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시험과 군사연습을 하면서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2006년 리덩후이가 연임에 성공한 이후 양안 간의 경색국면도 다소 진정되는 듯 했다. 특히, 1998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2차 왕·구회담에서는 양안의 교류·대화·상호방문 등 정치문제를 다룸으로써 정치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sup>4)</sup>

그러나 양안 간 정치교류협력은 양국의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제한적이었다. 대만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무제한으로 확대할 경우 대만경제가 중국경제에 종속되고 궁극적으로 중국에 흡수·통합될 것을 우려, 국가안보·국가이익·양안 간 장기적 정치안정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양안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대만은 1996년 ‘계급용인(戒急容忍)’으로 명명된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였다.<sup>5)</sup> 더욱이 리덩후이는 ‘대만과 중국은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양국론(兩國論)’을 주장함으로써 양안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다.

2000년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더욱 교착되었다. 다만 집권 초기에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천수이벤이 대만독립, 국호 개명, 통일·독립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양국론의 헌법삽입 등을 시도하지 않고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을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은 중국이 대만을 대등한 정치적 실체라는 점을 인정,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위협을 포기해야 하며, 대만의 국제무대 복귀를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양안 간 전면적인 삼통 대신 제한적인 삼통 즉, 진먼(金門), 마주(馬祖), 평후(澎湖) 3개 섬과 중국 간 삼통을 허용하는 ‘소삼통(小三通)’을 실시했다.<sup>6)</sup>

그러나 천수이벤 총통이 대만해협 양안에 각기 하나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하면서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더욱이 대만사회의 분리주의와 독립논의의 확대를 배경으로 대만의 독립시도는 더욱 증폭되었다. 반면 중국은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당 대 당의 접촉을 추구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한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불허하며 대만독립을 시도할 경우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2005년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 평화통일, 대만인민의 희망에 부응, 대만독립의 분열활동

3) 張濤, 金千里, 『江八島的迷惑』, 臺北 瑞興圖書, 1996, pp. 4-8.

4) 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 진행 둘째, 쌍방의 두 기구 책임자 및 주요 간부들 간의 교류 강화 셋째, 양안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상호위탁, 상호협조 처리 넷째, 중국 해협회 회장의 대만 방문 『人民日報』, 1998년, 10월 16일.

5) 주요 내용은 사회간접시설 건설과 반도체 석유화학 등 첨단산업분야 그리고 단일 항목으로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6) 2005년 1월 56년 만에 양안 직항이 이루어진바 있다. 陳建民, 『非傳統安全與兩岸直航檢疫機制之探討: 以兩岸「小三通」為例』, 『臺灣研究』, 第4卷, 第11期 2006, 11, pp. 58-46.

에 대한 반대와 불타협을 핵심으로 하는 후진타오(胡錦濤)의 ‘호사점(胡四點)’과 「반국가분열법」의 제정을 통해 대만의 독립 시도를 견제하였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수이볜은 강경정책을 고수했다. 2006년 천수이볜은 신년사에서 기존의 ‘효율적 관리, 적극적 개방’을 ‘적극적 관리, 효율적 개방’으로 대중국 교류 정책의 기초를 조정하였고,<sup>8)</sup> 더 나아가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을 폐지하였다. 더욱이 민진당 정부는 국호 개정(正名) 등 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만독립을 선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양안의 정치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그러나 민진당 집권기 경색되었던 양안관계는 2008년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급속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2008년 5월 출범한 마잉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제 활동공간의 확대를 위해 양안의 긴장·대립관계를 지양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안정책의 기초를 조정하였다. 즉, 대만은 ‘통일을 하지 않고, 독립시도를 하지 않으며,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신삼불(新三不: 不統、不獨、不武)’ 정책을 대륙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중국과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는 실리적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대만은 하나의 중국과 ‘92공식(九二共識)’을 기초로 독립·주권 문제 등 양안 간 내재해 있는 복잡한 논쟁을 유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양안주민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우선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했다.<sup>9)</sup> ‘평화와 발전’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주창하며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던 중국 역시 양안관계의 안정과 통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에 호응했다.

이에 따라 양안은 우선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협상부터 재개하였다.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기회 이사장과 천원린(陳雲林) 중국 해협회 회장을 대표로 하는 장첸회담이 양안회담의 주요 창구로 활용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2008년 6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까지 양안은 모두 7차례의 장첸회담을 개최하고 16개의 협의서를 체결하는 제도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표 1> 양안회담의 제도화 성과

	일시	장소	주요 성과(합의서)
1차	2008.06	중국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협양안세계회담기요(海峽兩岸包機協議)</li> <li>- 해협양안 대륙주민의 대만여행에 관한 협의(海峽兩岸關於大陸居民赴臺灣旅遊協議)</li> </ul>
2차	2008.11	대만 타이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협양안해상운수협약(海峽兩岸海運協議)</li> <li>- 해협양안항공운수협약(海峽兩岸空運協議)</li> <li>- 해협양안우편협약(海峽兩岸郵政協議)</li> </ul>

7)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에서 대만의 분열을 조성하거나, 대만 분열의 중대 사태 발생하거나, 평화통일 가능성이 상실할 경우에 비평화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병곤,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분석」, 『통일경제분석』 2005-06, 통일연구원, 2005.3.

8) 宋鎮照, 「從兩岸經濟交流與立場看2007年發展趨勢」, 『展望與探索』, 第5卷, 第1期, 2007, 1, p. 2.

9) 張榮恭, 「精進兩岸雙贏新局: 國民黨政府大陸政策的理念與實踐」, 蔡榮用主編, 『馬總統執政後的兩岸新局: 論兩岸關係新發展』, 臺北: 遠景基金會, 2009, p. 48.

	일시	장소	주요 성과(합의서)
			- 해협양안식품안전협약(海峽兩岸食品安全協議)
3차	2009.04	중국 난징	- 해협양안공동범죄소탕 및 사법공조협약(海峽兩岸共同打擊犯罪及司法互助協議) - 해협양안항공운수보충협약(海峽兩岸空運補充協議) - 해협양안금융협력협약(海峽兩岸金融合作協議)
4차	2009.12	대만 타이중	- 해협양안 농산물 검역검사 협력협약(海峽兩岸農產品檢疫檢驗合作協議) - 해협양안 표준계량인증 협력협약(海峽兩岸標準計量認證合作協議) - 해협양안 어선선원 노무협력협약(海峽兩岸漁船船員勞務合作協議)
5차	2010.06	중국 충칭	-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 해협양안지적재산권 보호협정(海峽兩岸智慧財產權保護合作協議)
6차	2010.12	대만 타이베이	- 해협양안의료위생협력협약(海峽兩岸醫療衛生合作協議)
7차	2011.10	중국 톈진	- 해협양안핵안전협력협약(海峽兩岸核電安全合作協議)

자료: 臺灣行政院大陸委員會, <http://www.macc.gov.tw> (검색일: 2011. 10.10)

## 2. 비정치적 교류협력 관계

중국과 대만 간의 무역 및 투자 등 경제 분야와 인적 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적 교류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양안 간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두 자리 수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빠르게 편입되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되었다. 대만 역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중 하나로서 80년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상승, 대만화폐가치 상승, 지가상승, 환경보호의식의 제고 등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장려하였다. 즉, 대만은 대중국 투자로 생산단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 확대를 추구하였다.<sup>10)</sup> 이처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노동력, 원자재, 시장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과 자본, 기술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대만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양안 경제 교류협력은 일관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실제로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양안 무역은 1억달러 이하의 수준이었으나, <표 2>에서 보듯이 1995년 225억달러, 2000년 312억달러, 2005년 763억달러, 2010년 1,207억달러로 급증해 왔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이 수입액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대만의 무역흑자도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1995년 163억달러, 2000년 187억달러, 2005년 361억달러, 2010년 48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대만 전체의 무역수지가 233.64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무역의 중국의존도가

10) 張冠華, 「兩岸經濟關係的演變·影響與展望」([http://www.usc.cuhk.edu.hk/wk\\_wzdetails.asp?id=4123](http://www.usc.cuhk.edu.hk/wk_wzdetails.asp?id=4123))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표 2〉 대만의 대중국 무역추이

(단위: 억\$)

년도	수출	수입	합계	무역수지
1995	194.34	30.91	225.25	163.43
2000	250.1	62.29	312.39	187.81
2001	256.07	59.03	315.1	197.04
2002	315.29	79.47	394.97	235.60
2003	382.93	110.18	493.11	272.75
2004	489.3	167.93	657.23	321.38
2005	562.72	200.93	763.65	361.78
2006	633.32	247.83	881.15	385.49
2007	742.46	280.15	1,022.61	462.31
2008	739.78	313.91	1,053.69	425.87
2009	620.91	245.03	865.94	375.88
2010	848.32	359.52	1,207.84	488.80
2011*	842.04	403.95	1,245.99	438.09

\*2011년은 1~11월

자료: 「兩岸貿易金額之各種統計」, 『兩岸經濟統計月報』, 第228期 를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무역 증가는 양국의 상호 무역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양국 간 경제규모의 차이로 인해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중국의 대대만 무역의존도보다 높은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수출의 경우 1993년 16.28%에서 2010년 30.89%로 증대되었으며, 수입의 경우에도, 1993년 1.31%에서 2010년 14.31%로 증대되어 총무역이 1993년 9.19%에서 1995년 10.36%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10년의 경우 22.97%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대만 무역의존도는 1993년 7.71%에서 1996년까지 8.21%로 상승하다가 이후 매년 하강해 2010년 4.06%로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출의 경우, 1993년 1.11%에서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2010년 2.28%로 증대되었는데, 수입의 경우, 1993년 13.46%에서 1997년 15.77%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0년 6.08%까지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대만은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臺灣對中國大陸・香港及全球貿易順差統計」, 『兩岸經濟統計月報』, 第228期, 2012.3. 이 글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대만 대륙위원회 통계에 의존하였다.



〈표 3〉 중국과 대만의 상호 무역의존도

년도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중국의 대대만 무역의존도(%)		
	수출	수입	총무역	수출	수입	총무역
1993	16.28	1.31	9.19	1.11	13.46	7.67
1994	16.99	2.17	9.93	1.54	13.86	7.56
1995	17.15	2.97	10.36	2.08	14.71	8.02
1996	17.63	2.97	10.79	2.03	14.93	8.21
1997	18.08	3.41	11.03	2.14	15.77	8.11
1998	17.62	3.91	11.00	2.24	14.15	7.39
1999	17.22	4.07	11.00	2.32	12.86	7.17
2000	16.46	4.43	10.67	2.50	11.11	6.59
2001	20.27	5.47	13.45	2.22	10.51	6.18
2002	23.30	7.04	15.89	2.45	10.68	6.36
2003	25.43	8.61	17.70	2.51	9.28	5.79
2004	26.83	9.95	18.72	2.83	8.72	5.69
2005	28.36	11.00	20.04	2.64	8.53	5.37
2006	28.27	12.23	20.65	2.56	8.00	5.00
2007	30.10	12.78	21.95	2.30	7.77	4.70
2008	28.94	13.06	21.24	2.20	6.53	4.11
2009	30.49	14.05	22.91	2.04	6.17	3.92
2010	30.89	14.31	22.97	2.28	6.08	4.06

자료: 「臺灣對中國大陸貿易占我外貿之比重」과 「中國大陸對臺灣貿易占中國大陸外貿之比重」, 「兩岸經濟統計月報」, 第228期 를 참고하여 작성

양국 간 투자현황을 보면, 중국의 대만 투자는 미미한 반면,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꾸준히 증대해왔다. 투자제한 조치가 완화된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중국의 대만 투자는 200건에 1억7,400만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표 4〉를 보면, 국민당 집권 이후 3년간 대만의 대중국 투자액은 324억달러로서 2007년까지의 누적 투자액인 649억달러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감소를 보인 2009년을 제외하면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ECFA가 발효된 2011년은 1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135.4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11월 중 대만의 대외투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79.1%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비중 60.8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sup>12)</sup>

12) 「兩岸經濟統計月報」, 第228期, 2012. 3, p. 31.

〈표 4〉 대만의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억US\$, %)

년도	1991~2007	2008~2010	2008	2009	2010	2011*
투자액	648.7	324.5	106.9	71.4	122.3	135.4
증가율	-	-	128	-33	102	-

\* 2011년은 1~11월

자료: 『兩岸經濟發展月報』, 第228期, 2012.3, p. 15.

대만기업의 투자 패턴도 몇 가지 변화를 보였는데, 첫째, 투자부문에 있어서 대만의 투자는 1997년 이전 노동집약형산업(식품, 섬유 등)위주에서, 1998년 이후 전자정보통신 위주의 과학기술산업 위주로, 2002년 이후 첨단기술 분야 및 서비스 산업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대만의 중국투자 기업이 중소기업 위주에서 대기업 및 상장기업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대만의 중국투자도 점차 대형화·집단화·대중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WTO가입 이후 대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국 및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단가 절감만이 아닌 현지생산, 현지관리, 현지판매 등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지역도 동남 연해지역 위주에서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선전(深圳), 후이저우(惠州), 칭저우(慶州) 등 화남지역에 65%, 상하이(上海), 수저우(蘇州), 지아딩(嘉定) 등 화동일대에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발해경제권 지역으로도 점차 이동하고 있다.<sup>13)</sup>

다음으로, 양안 간 인적 교류 추이를 보면, 1987년 대만이 대만주민의 중국 내 친지방문을 허용하고 뒤이어 중국인의 대만 내 배우자 및 친지방문과 장례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다만, 대만은 단기간 중국인들의 과도한 유입이 초래할 대만사회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인의 대만방문을 제한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인의 중국방문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중국 왕래를 허용하고 2년까지 체류를 허가한 반면, 중국의 대만방문은 중국인 배우자, 3촌 이내 친지의 방문, 친지방문안, 단체관광, 학술문화교류만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표 5〉와 같이, 중국방문 대만인이 대만방문 중국인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중국과 대만이 직항과 대만 관광 허용을 합의한 2008년 이후 대만 방문 중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4)</sup>

13) 唐彥博, 「兩岸經濟發展趨勢與展望」, 『展望與策』, 第5卷, 第4期, 2007. 4, pp. 26-32.

14) 대만 방문 중국 관광객은 2009년 601,754명, 2010년 1,188,987명, 2011년 1,286,574명으로 당 해 년도 대만 방문 중국인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표 5〉 양안 간 인적 교류추이

(단위: 명)

년도	대만 방문 중국인	중국 방문 대만인
1987~1993	55,525	5,726,350
1994	23,654	1,390,215
1995	42,295	1,532,309
1996	56,753	1,733,897
1997	74,237	2,117,576
1998	90,986	2,174,602
1999	106,771	2,584,648
2000	116,311	3,108,677
2001	133,988	3,441,500
2002	157,815	3,660,600
2003	134,811	2,731,900
2004	139,344	3,685,300
2005	179,314	4,109,200
2006	257,763	4,409,662
2007	374,326	4,627,811
2008	291,696	4,385,591
2009	966,963	4,484,100
2010	1,580,099	5,140,600
2011	1,727,293	5,262,000

자료: 臺灣內政部門入出局及移民署

## IV. 중국-대만 관계의 평가와 시사점

### 1. 남북한 교류협력과의 비교평가

이상에서 보듯이, 양안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시켜왔다. 그리고 이 점은 마잉주 정부 들어 ECFA를 체결해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이루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관광, 문교, 언론 및 사법 등의 교류를 동반하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물론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상호 신뢰형성을 통한 평화정착을 거쳐 정치적 통합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남북한의 경우는,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 당국 차원의 정치적 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며, 이를 동인으로 삼아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을 이끌어 온

특징을 보인다.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경제적 교류협력이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상호 이익과 신뢰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관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핵 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남북 교류협력은 경색되고 남북관계는 긴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안은 모두 시장경제를 운용하나 남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 체제와 이념 및 통일정책의 근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공식적 정치대화가 양안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양안관계와 남북관계의 비대칭적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양안은 국토, 인구, 국력 등 국가 규모의 비대칭성이라는 객관적 현실과, 대만을 하나의 성 즉 지방으로 간주하는 중국에 대한 대만의 반발 등 상호 인식의 차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sup>15)</sup> 다만, 양안은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정치적 입장을 우회할 수 있는 준정부기구인 ‘해기회’와 ‘해협회’를 교류협력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남북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 정치, 군사회담을 포함해 당국 간 공식 회담을 꾸준히 개최해왔는데, 이는 남북관계의 비대칭적 수준이 양안관계처럼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록 실패한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지만, UN 가입국이고 수교국이 160개국에 달하는 북한을 수교국이 23개국에 불과하고 UN 비가입국인 대만과 등치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다.<sup>16)</sup>

따라서 양안관계와 남북관계가 갖는 비대칭성과 차이점으로 인해 양안 중 어느 일방에 고정한 시사점을 얻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다만 양안과 남북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다르지만, 양자관계를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태도에서 보면 유사점도 발견된다. 즉,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국은 대만에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고, 반면 대만은 흡수통합을 우려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중국은 남한과, 대만은 북한과 유사하다. 또한 국내의 정치적 여론이 양자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는 대만이 한국과 유사하다. 더욱이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미국의 존재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중국의 존재도 양안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도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긴 하지만, 양안간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교류협력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양안 간 비정치적 교류협력 특히 경제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있다. 먼저, 경제 교류협력의 수준을 비교하면, 중국과 대만, 남북한의 경제규모와

15) 대만인의 정체성에 관한 1992년 6월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만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3%, 중국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2%였으나, 2005년 12월의 조사에서는 각각 46.5%, 7.3%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양안교류의 진전 및 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 평가된다. J. Bruce Jacobs, Hsiao Ben Liu, "Lee Teng-hui and the Idea of 'Taiwan'", *The China Quarterly*, Vol. 190, June 2007, pp. 390-392.

16) 『2010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10, p. 255.

발전수준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0년 한해에만 1,207억달러에 달하는 양안 무역액에 비해 남북 교역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남북 간 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후 2010년까지 누계 액은 약 146억달러에 불과하다. 다만 <표 6>에서 보듯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2010년의 경우에도 19억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호무역의 절대적 수치 비교와 달리 상호 무역의존도에서는 의미 있는 점도 발견된다. 양안 간 무역의존도가 2010년의 경우 대만이 22.97%, 중국이 4.06%로 비대칭적일지라도 상호성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남북은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무역에서 차지하는 남한의 비중이 30% 이상인데 비해 남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sup>17)</sup> 따라서 양안의 경제교류협력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된 반면, 남북한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아닌 북한의 대남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sup>18)</sup>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점은 남북경협 추진방향에 지대한 함의를 준다.

<표 6> 북한의 대남한 무역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89-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11	합계
무역액	2,659	641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6,320
비중* (%)	-	22.1	23.2	19.6	26.0	31.1	38.9	32.3	33.0	31.4	-	-

\*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KOTRA, 「연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재작성

투자를 비교하면, 2010년까지 대만의 대중 투자누적액은 973.2억달러로 2010년 한해 122.3억 달러, 2011년 상반기에만 71.2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남북교류가 비교적 활발했던 시기의 남한의 대북 투자액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차례로 2,170만, 2,757만, 1,211만, 755만, 1,180만, 1,866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sup>19)</sup> 여기에도 상업성보다 지원성 성격이 강한 남북경협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2009년까지 남한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을 포함한 대북지원 누적액은 29억 3,400만달러로서, 이를 모두 합해도 남북경협 관련 투자는 양안의 그것에 견줄 바가 못 된다.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볼 때, 1987년부터 시작된 양안의 교류가 남북의 교류보다 훨씬

17) 2010년의 경우 한국의 총 대외무역액은 약 8,916억 달러로서, 이 중 북한과의 무역 약 19억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0.002%에 불과하다.

18) 물론,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006년 39%, 2008년 49.5%, 2010년 56.9%로서, 한국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양안 및 남북한의 분단국 상호관계의 비교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의 심화는 분명한 현상이다. 중국-대만, 남북한, 동서독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비교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로는 주성환, 「분단국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비교분석」, 『비교경제연구』, 10권 2호, 2003, pp. 1~39.

19) 임태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서울: 집문당, 2007, p. 144.

활발하다. 실제로 2006년에서야 왕래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남북의 경우보다 80년대 후반부터 왕래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06년 한 해에만 460만명 이상을 기록한 양안의 교류수준이 훨씬 높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양안은 관광 및 경제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목적의 교류도 폭 넓게 진행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표 7〉 남북 인적교류 추이

(단위: 명)

연도	89-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남→북	27,154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6,047	980,731
북→남	1,534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14	7,881
합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30,251	116,061	988,612

자료: 『2012통일백서』, 통일부, 2012, p. 280.

물론 중국의 인구규모, 북한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양안 및 남북한의 인적 교류를 양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에서 인적 왕래가 갖는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양안 및 남북한의 교류협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런 점에서, 인적교류를 둘러싼 양안의 정책과 입장을 남북관계에 교차 적용한다면, 적지 않은 시사점 도출도 가능하다. 즉, 전면적인 왕래 및 교류가 아닌 제한적·점진적이면서 경제이익 창출이 가능한 교류를 허용하는 점에서 그렇다.

이와 같이 양안의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그것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에 시사하는 함의도 존재한다. 다만, 북한의 입장이나 상황이 중국과 유사하고 한국이 대만과 유사하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대만과, 한국이 중국과 유사한 특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4국의 입장이나 상황이 사안별로 교차하고 있다.

## 2.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양안교류협력과 남북교류협력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찾기보다 양안관계의 일반적 특징 속에서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찾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주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안의 교류협력 사례는 남북 교류협력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ECFA의 체결을 통한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는 양안 간 긴장 완화 및 안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고 향후 평화정착과 장기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바, 남북한 교류협력 관계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즉, 양안은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협력을 지속하였고, 이것이 관계 정상화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은 정치군사적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교류의 유지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축적함으로써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향후 긴장 해소와 관계 정상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갈등 및 여론을 관리하는 대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 정치 및 여론을 관리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만에 비해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와 여론의 변화 폭이 더 크고, 종종 남북갈등을 넘어서는 남남갈등이 야기되는 바, 갈등을 해소하고 변화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정책결정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대만과의 ECFA 체결 시 경제교류 증대가 정치통합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양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는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방이 손해를 감수해야 경제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국이 일정 수준의 손해를 감수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양안의 교류협력 사례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일방이 적극적·공세적 교류협력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세적·방어적으로 접근하는 일방이 오히려 쌍방의 교류협력의 속도와 범위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 교류협력의 경우에도 남한이 비교적 적극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오히려 북한이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자 북한은 이에 맞서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는 점도 그렇다.

다섯째, 그런 점에서 다음의 시사점은 유용하다. 즉, 양안 경제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쌍방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인바, 일방적 지원-수혜의 관계보다 쌍방 모두에 이익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교류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 남북경협은 북한에 이익이 주어지지만 남한경제에 주는 혜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기에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점에서 남한이 일정 수준 손실을 감수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이 모두 상생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와 관련 정치적 경색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안 경제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유지·전개되는 이유는 민간과 정부의 분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남북경협은 대북지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정부주도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남북간



정치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대내외 정치적 영향 및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형의 교류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양안 교류협력의 사례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경제교류의 증대가 단기간에 정치통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북은 경제교류협력이 사회교류와 통합을 거쳐 정치통합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남북관계의 변화에 파급효과가 큰 인적교류를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일방은 흡수통일을 우려해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심지어 분리·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일방은 자국 주민만이 아닌 상대국 주민의 인식 및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 남북은 군사영역을 제외하고 남한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이러한 우월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식 및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주민의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은 중개지의 존재는 양안 상호간 정치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초기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 및 시장원리에 입각할 경우 남한의 대북 투자 확대가 어려우며,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할 경우 중국을 경유한 남·북·중 3국 협력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외부의 영향력과 관련한 시사점도 중요하다. 쌍방의 균형이 상실되더라도 외부의 강력한 영향력은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쌍방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분단을 고착시킬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미관계의 변화가 양안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경우에도 가장 강력한 외부의 영향력인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미치는 외부 영향력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안의 교류협력 경험은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의 진전에 일정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입장을 중국이나 대만의 어느 일방에 고정하지 않고 양안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남북관계에 교차적으로 적용한 결과, 남북 교류협력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점, 교류협력의 지속을 위해서는 한국이 일정 수준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점, 상대적 열위에 처해 있는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점 등은 교류협력의 초기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다만, 남북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합을 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남북 긴장완화 또는 평화, 협력 등의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주기에는 그 규모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정치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경협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확대와 함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정치관계에도 평화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경협을 점차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양안의 사례처럼 반관반민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 간 교류협력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교류협력과 인적 왕래가 확대될수록 남북 주민의 상호인식의 차이와 괴리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이 평화, 협력,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치공유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제교류협력의 확대가 정치적 교류협력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양안의 경험과 남북 교류협력에서도 정치적 변수가 항상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남북은 경협과 더불어 정치군사적 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에서 보듯이, 남북 교류협력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군사적 보장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과정에서 군사적 협력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경제적 통합이 정치군사적 갈등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실현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안과 남북한의 분단 해소과정에는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6자회담, 북미관계 등 대외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는 못했다. 그 이유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핵심은 북미간의 상호불신에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만이 아닌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남·북, 한·미, 북·미의 3자 3변관계의 개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 통합에 적지 않은 이해관계에 있는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과의 협력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이러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발굴과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양안관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양안관계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안관계를 규정하는 대외·안보적 요인과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안보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찾는 연구와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안의 증대된 경험의 정치·군사적 평화로 어떻게 전환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